

‘포스트 이낙연’ 민주 당권 레이스 점화



민주당 당권주자 가나다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이낙연 대표 뒤를 이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예비후보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며 당권 레이스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1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5월 예정된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 홍영표의원(4선·인천 부평을)이 가장 먼저 불을 댕겼다. 홍 의원은(4선·인천 부평을)은 지난 15일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잇따라 방문, 이용섭광주시청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면담을 가졌으며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잠행 수준의 조용한 행보를 보인 홍 의원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권 레이스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또 국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 의원(인천 부평을)이 지난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기존 '기부대 양여 전제 지자체간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방부가 소극적이라며 "국방부 중심의 광주-전남 동반성장 방안, 즉 양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에 출마하는 우원식의원(4선·서울 노원을)도 설연휴 전에 전남 지역을 비공개 일정으로 돈 것으로 알

홍영표 “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 적극 나서야”
우원식 “나주 한전공대·광주 車산업 적극 지원”
송영길 “광주·전남 세계적 에너지밸리로 육성”

려졌다. 우 의원도 조만간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당권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인 우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소멸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특히 가장 열악한 전남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일자리와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주 한전공대 설립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을)도 광주와 전남을 수시로 찾아 텃밭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오는 3월 초 광주·전남을 방문하고 본격적인 표밭잡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한전공대와 광주형 일자리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또 “풍력에너지와 수소산업을 한전공대와 에너지산업과 연결해 광주전남을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25조는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도부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는 4·7 재보선 이후 5월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서선욱기자



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 넘어 화해·상생의 미래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박소정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소 의원은 “오늘 전달한 탄원서에 서명한 유족분들이 총 721분이다. 그만큼 남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대표께서도 2차례에 걸쳐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말씀하셨다. 꼭 이번 2월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로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기셨다. 저희 국회도 좀 많이 늦었다.”며, “제가 행안위원장 있을 때 아픔 받은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단 말씀드려서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지를 밝혔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순천을 방문해 여순항쟁탑을 참배하고 유족들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고 방명록을 작성하여 특별법의 2월 중에도 3월초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구체적인 행동의 결실을 맺어줄 바라는 유족들이 탄원서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전달식에는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김승남, 김희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등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박소정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소 의원은 “오늘 전달한 탄원서에 서명한 유족분들이 총 721분이다. 그만큼 남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대표께서도 2차례에 걸쳐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말씀하셨다. 꼭 이번 2월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로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기셨다. 저희 국회도 좀 많이 늦었다.”며, “제가 행안위원장 있을 때 아픔 받은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단 말씀드려서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2일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 의원은 1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신속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계재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된다. 소 의원은 최대한 심사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故 박원순, 성범죄 가해자냐” 질문에 여가부장관 “그렇게 생각해”

野 전주혜 “여가부 역할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영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범죄 가해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 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 장관에게 “이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적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차 정 의원이 “박원순이 가해자인 걸 인정하느냐” 질의하자, 정 장관은 “인권위나 경찰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그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여가부 역할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며 재차 “가해자가 누구냐” 묻자,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 장관은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박 전 시장 성폭력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명료한 수사결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차 가해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